

칩값 뛰는데 애플 폴더블 가세... 삼성, 프리미엄 전략 시험대

메모리 가격 급등에 원가 부담 확대
삼성, 갤럭시 S26 가격올려 비용압박 반영
차기 Z폴드 가격전략 놓고 관심 집중
애플, 연내 폴더블 아이폰 출시 가능성



폴더블 아이폰 예상 이미지. /맥루머스 X 캡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까지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가 압박에 새로운 경쟁 변수까지 더해지며 삼성의 선택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솔루션 매입 비용은 13조 9272억원으로 전년(10조9326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비용이 늘어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메모리 가격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고 낸드플래시 가격은

9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메모리 등 반도체 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스마트폰 제조원가 압박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칩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 공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2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00달러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 시리즈와 유사한 가격대다.

그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과 Z폴드 시리즈를 앞세워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해왔다. 다만 애플이 시장

에 진입할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사는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차기 폴더블폰 가격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매체 샘모바일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삼성전자가 차기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8 가격을 전작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가격 인상 대신 동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폴더블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삼성전자는 가격 전략과 함께 차세대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은 화

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 제품은 약 30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무게 부담 등으로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이 전체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내년 폴더블 전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까지 더해지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는 가격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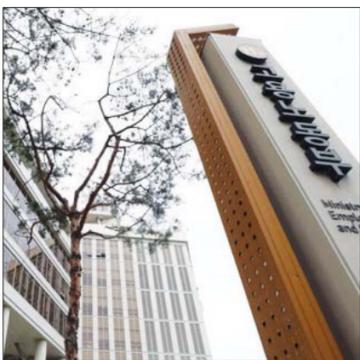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노란봉투법에 제조업 덮친 '원청 교섭'... 조선·철강 등 긴장

포스코·현대차 등 원청에 교섭 요구
원청 사용자성 둘러싼 공방 본격화
조선업, 하청 파업 땀 납기 차질 우려
철강업, 구조조정 갈등 변수로 부상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뉴스시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으로 조선·철강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과 구조조정 변수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차·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한국GM 등 주요 제조업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대상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 동일 성과급, 8시간 1공수, 최소 5일 유급휴일을

요구했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했다.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는 성과급 지급을,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와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는 자회사 매각 철회를 각각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12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248개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6곳이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핵심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했다.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는 지난 10일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7일 공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는 산업 특성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조선업은 사내하청 비중이 63.9%

로 높고 공정이 순차적으로 연결돼 있어 하청 공정 파업이 전체 납기와 지체상금(LD), 도크 가동률, 매출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업계도 하청 비중이 36.9%에 달하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정리해고나 공장 폐쇄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 생산은 원청과 하청이 정비·설비·운송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특정 하청 지회의 파업이 전후방 공정 전체를 멈춰 세우는 병목으로 변질 수 있다. 특히 고로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이어서 한 번 식으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실제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존재했다. 한화오

션사건에서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2022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판단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도 차별 시정 장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협력업체 단가를 조정하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임금 문제 역시 충분히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부스에 3만명 몰려... 전고체 소재 '주목'

30여 잠재 고객사와 개별 미팅 진행
현대차·토요타·삼성SDI 등 경영진 방문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오른쪽)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인터배터리2026 전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열린 '인터배터리 2026' 전시 기간 동안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자사 전시 부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전시 기간 동안 30여 곳의 잠재 고객사와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 부스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OEM)를 비롯해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CATL, 파나소닉 등 주요 배터리 셀 제조사 경영진이 방문했다.

관람객들의 관심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술과 개발 로드맵에 집중됐다. 에코프로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전고체용 양극재, 리튬메탈 음극재 등을 고객사와 협

의해 개발 중이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 연 5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사 일정에 맞춰 내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도심형 공교통(UAM)처럼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분야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해 소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동안 주요 산업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지난 13일 에코프로 전시관을 찾아 전고체 소재 개발 로드맵을 살펴본 뒤 "배터리 양극소재 경쟁력은 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질의 소재 공급을 통해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소부장 中企 140곳에 168억 R&D 지원

중기부, 비수도권 82곳 선발

정부가 국가 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 유망 중소기업 140곳에 총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차)' 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지역별 지원 규모가 할당된다. ▲경기(45개사) ▲대구·경북(17개사) ▲경남(14개사) ▲충남(9개사) 등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지원 대상인 140곳 중 82곳(약 58%)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발한다.

지방 맞춤형 유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도 손봤다. 각 지방중소벤처

기업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기획할 수 있는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을 감안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방산'과 '희토류' 분야를 신규 추가하는 등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소부장 지원 품목을 늘렸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다. 단 '소부장 강소기업 100+' 또는 '아니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오는 16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에서 사업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IRIS에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